

2025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협력: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들과 언덕



GREENPEACE

목차

목차	2
서론	4
1. 조사 배경.....	4
2. 조사 기획, 범위 및 방법.....	4
3. 조사 및 분석 유의사항.....	5
4. 조사 지역 수해 및 지원 현황.....	6
[수해 발생 경위 및 전체 피해 규모].....	6
[정부 및 지자체 복구 지원 예산].....	7
[민간 성금 및 구호 현황].....	7
[기타 특별 조치 및 제도적 대응].....	8
본론	9
1. 응답자 기초 조사.....	9
2. 수해의 물적 피해.....	11
[전체 물적 피해].....	11
[일상의 물적 피해].....	11
[행정기관 피해 평가 체감도].....	12
[신체적 피해].....	13
3. 수해 직후 대피.....	14
[대피 방법 및 수단].....	14
[임시 대피소 경험 및 평가].....	15
[임시 대피소 보급 물품별 평가].....	16
[임시 대피소 생활 만족도와 불편사항].....	18
[임시 대피소 외 임시 거주지 실태 평가].....	19
4. 임시주택.....	22
[임시주택 거주 만족도 및 제공 기간].....	22
[임시주택 외 거주 응답자].....	23
5. 수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25
[전체 IES-R-K 척도 검사 결과].....	25
[주요 요인별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25
[심리지원 서비스의 실태 및 평가].....	30
6. 재난 지원.....	33
[정보 전달 및 구호 서비스 평가].....	33
[임시 대피 기간 이후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	34
[성금 정보 전달 실태 및 필요 지원 현황].....	34
7. 복구와 회복.....	37
[복구지원비 평가].....	37
[피해 사실 조사 합리성과 복구지원비].....	38
[주택 피해 유형 및 차별 경험].....	39
[피해보상 문제 제기 여부 및 경험].....	41
[주택 복구].....	41
[소득 피해 현황 및 회복 전망].....	42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	44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45
[마을 공동체 결속과 갈등].....	46
결론	49
1. 보고서 요약.....	49
2. 정책 및 제도 개선 시사점.....	52

서론

1. 조사 배경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최대 피해지인 산청 지역의 수해는 주택, 산림, 생업 기반이 파괴되는 물리적 피해를 낳았을 뿐 아니라, 대피와 임시 거주 과정, 보상과 복구,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공동체 관계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피해 주민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잇달아 제기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개별 사례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 주민 전체가 재난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본 조사는 수해 규모를 다시 집계하거나 피해 금액을 추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피해 주민이 재난을 어떻게 인지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피했고, 이후 임시 거주와 복구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의 권리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재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논의에서 피해주민 권리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기획, 범위 및 방법

[조사 기획]

본 실태조사는 그린피스와 두 개 단체¹가 기획하고 산청 현지 단체인 ‘그늘과 언덕’과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현지 조사를 맡아서 진행되었다.

현장 조사는 피해 주민 조직(수해주민대책위, 농민회, 작목반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현지 주민 조직과 협업하는 조사 방식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대책위원회 및 지역 시민사회가 수해 이후 대응을 주도해 온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조사 접근 경로의 특성이 곧 실태조사 참여자(응답자) 특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 범위]

본 조사는 2025년 7월 발생한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가 집중된 지역, 직업군, 피해 규모 및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했다.

기존의 재난 대응 연구는 주로 재난 발생 원인, 면적, 피해액 등과 같은 ‘사건 중심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재난은 단일 시점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삶과 생활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 조사는 피해 경험을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초기 대피 상황, 임시 대피소 및 임시주택 이용, 생업과

¹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일상생활의 변화, 공동체 관계의 변동, 심리적 어려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피해 주민들에 미치는 생활상의 영향과 공동체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여러모로 측정했다. 이를 통해 수해 주민들이 겪는 장기적 피해 양상과 제도적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1장. 응답자 기초 조사
- 2장. 수해의 물적 피해
- 3장. 수해 직후 피해
- 4장. 임시주택
- 5장. 수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 6장. 재난 지원
- 7장. 복구와 회복

[조사 방법]

본 조사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9일간 산청군 피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객관성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대인 면접 방식 조사를 진행했으며, 심리 상태나 민감한 주제와 같은 일부 문항에서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모든 조사 과정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 착수 전 응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을 상세히 고지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했다. 또한 성실한 응답 및 조사의 완성도를 위해 응답자에게는 조사 참여에 따른 소정의 사례를 제공했다.

- 조사 대상: 산청 수해 지역 주민
- 표본 크기: 128명
- 표집 방법: 임의 표집 · 유의 표집 · 눈덩이표집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인 면접조사 및 자기 기입방식
-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8일 ~ 11월 15일 (19일간)

3. 조사 및 분석 유의사항

본 조사는 수해 이후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나,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조사는 수해 지역 거주자라는 특수한 모집단의 성격을 고려해, 인구학적 통계에 기반한 엄격한 비례 할당 표집이 아닌 임의 표집 · 유의 표집 · 눈덩이 표집 방식을 사용했다.

둘째, 조사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특정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표본의 특수성 및 크기 제한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수치상의 유의성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의 현장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자료라는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재난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생활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부 문항에서 응답 거부 등 결측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결측치가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통계표 하단에 문항별 유효 응답 수를 명시했다.

넷째, 본 보고서의 빈도표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했으며, 이에 따라 항목별 구성비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표기했으며, 반올림 과정에서 수치가 높아진 경우 '약'을 붙여 표시했다.

다섯째, 본 조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된 횡단적 조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재난 복구 단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앞으로 이를 추적할 후속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4. 조사 지역 수해 및 지원 현황

[수해 발생 경위 및 전체 피해 규모]

- **발생 경위:**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를 강타한 '극한 호우'로 인해 산청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7월 19일에는 산청읍 383mm, 오부면 368mm, 차황면 357mm, 신등면 230mm, 신안면 212mm, 단성면 203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 **인명 피해:**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총 19명). 산청군은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을 하달하였으며, 2,113세대 2,855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²
- **재산 및 공공시설 피해³:**
 - **공공시설(798개소):** 하천 46개소, 소하천 156개소, 산사태·임도외 79개소, 도로·소규모외 517개소 등
 - **사유시설:** 주택 803건, 농경지 625헥타르, 산림작물 3,786건, 농림축산시설 4,751건
 - **피해액:** 3,271억 원(공공시설 1,968억 원, 사유시설 1,303억 원)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최대 300~8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특히 산청군 단성면 일대에는 시간당 101mm에 이르는 극한 호우가 관측되면서 대규모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도로·소규모외 517개소, 하천 46개소 등 공공시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주택 803동과 625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매몰되는 등 생활 및 생업 기반 전반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인명 피해 역시 매우 컸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25일 기준으로 발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에 따르면,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산청군에서만 14명이 사망하는 등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집계 과정에서 경상남도도 산청군에서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 등 총 19명의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고, 산청군이 자체 집계한 호우 피해 현황에서도 인명 피해 19명, 주민 대피 2,113세대로 공식 확인되었다.

² 산청군 홈페이지, 호우피해 복구 지원 현황, 2025. 8. 14, <https://www.sancheong.go.kr/www/contents.do?key=6819>

³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25.7.16~20. 호우피해 복구계획', 2025. 8.19.

[정부 및 지자체 복구 지원 예산]

- **중앙정부 복구 지원:** 산청군은 피해 발생 직후인 7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추가 긴급 지원하였다.
- **자체 대응 및 경남도 지원:**
 - 경상남도는 원상회복을 넘어선 ‘재발 방지형 복구’를 위해 총 1조 1,947억 원(국비 포함)의 복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산청군을 포함한 지방 하천 16곳의 제방 보강 등에 4,27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5년 8월 중대본 회의 심의를 통해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97억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공공시설 복구 중 피해 정도가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1조 3,520억 원 규모의 단순 기능 복구를, 대규모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방재 성능 강화를 포함한 본격적인 ‘복합 복구’를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⁴ 산청군이 속한 경상남도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액이 5,17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복구비 총 1조 1,9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국비는 9,771억 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를 일부 경감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산청군의 복구 사업 역시 이 틀 안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 긴급 복구와 항구적인 복구, 재해예방시설 보강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⁵

경상남도는 중앙정부 복구비와 별도로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자체 재원을 투입해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와 생활 지원, 재해예방 사업을 병행하였다. 산청군은 호우 피해 직후부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응급 복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도로·하천 정비, 토사 제거, 주택 및 농경지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24일간 군,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 총 49,796명의 인력이 복구작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산청군은 굴삭기(7,844대), 덤프(3,116대), 살수차(141대) 등을 지원하였고, 임시 거주 시설 운영, 심리지원 등의 대응도 병행하였다.⁶

[민간 성금 및 구호 현황]

- **구호 물품 지급:** 산청군 통합봉사지원단을 통해 구호 키트 1,972세트, 모포 및 담요 1,185매 등 총 61만여 점의 생필품이 이재민에게 전달되었다.⁷
- **자원봉사 및 기부:** 누적 12,389명의 자원봉사자가 복구 현장에 투입되었다.

⁴ 행정안전부, 7월 호우 피해복구에 2조 7235억 원 투입...주민지원 대폭 강화, 2025.8.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16>

⁵ 조윤제,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조 1947억 원, 경남일보, 2025. 8. 19, <https://v.daum.net/v/Pu1imCLKGe>

⁶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25.7.16~20. 호우피해 복구계획, 2025. 8.19.

⁷ 산청군 홈페이지, 호우피해 복구 지원 현황, 2025. 8. 14, <https://www.sancheong.go.kr/www/contents.do?key=6819>

- **재해구호금:**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 구호금을 전달하였으며, 경상남도의회는 성금 1,000만 원을 맡겼다.
- **제도적 기부:** 산청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해 수해 복구 전용 기금 모금을 시행하였으며, 기부자에게 3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수해가 발생한 이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재해구호 성금 모금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성금은 산청군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비, 주거와 생필품 지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고 지자체는 밝혔다. 또한 산청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하여 10억 모금 목표를 세웠고 모금된 기부금은 세부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복구 현장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⁸

[기타 특별 조치 및 제도적 대응]

- **세제 및 금융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주민의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지방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가 시행되었다.
- **시스템 개편:** 산청군은 재난 대응의 한계를 절감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24시간 전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시스템을 도입했다.⁹

이번 산청 수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방재 정책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피해 지역의 방재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구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공공시설을 복구할 때 단순한 원상복구에서 벗어나 하천·사방댐·배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재해예방 기능 강화를 병행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경상남도 역시 “복구비 총 1조 1,947억 원” 편성을 발표하면서, 이번 복구에선 단순한 원상회복을 넘어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하천 정비, 배수 체계 보완 등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 단위 종합 복구 및 구조적 개선 복구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¹⁰

산청군 차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호우 피해 복구 지원 현황을 별도 페이지로 상시 공개하며, 인명 피해와 주민 대피 현황, 구호 물품이나 급수 지원, 복구 인력 투입 상황 등을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하는 등 재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또한 전기·수도·도로 등 필수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는 일부 산간 마을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를 검토하는 등, 기존 거주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수준의 특별 조치도 검토, 추진하고 있다.

⁸ 산청군청, 집중호우 피해 성금 고향사랑기부로, 2025. 7. 25, <https://www.sancheong.go.kr/news/selectBbsNttView.do?key=1825&bbsNo=115&nttNo=148939&searchCtgr=&search>

⁹ 원경복, 초유의 재난 겪은 산청군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경남일보, 2026.1.28,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256>

¹⁰ 조윤제,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조 1947억 원, 경남일보, 2025. 8. 19, <https://v.daum.net/v/Pu1imCLKGe>

본론

1. 응답자 기초 조사

응답자 125명¹¹ 중 중년(40세 이상, 60세 미만)이 약 37%(46명), 장년/노년(60세 이상, 80세 미만)이 48%(60명), 초고령인 80세 이상이 2%(3명)로, 설문에 참여한 수해 피해 주민의 절반인 50%(63명)가 장년/노년층 및 초고령층인 연령 구성¹²이다(표1-1). 성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남성(약 64%)이 여성(약 3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2).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복수응답)를 보면, 생계수단¹³ 피해가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영업장 피해(73건), 주택 피해(54건), 본인 신체 피해(12건), 기타(1건) 순이다(표1-3).

전체 응답자의 거주기간을 보면, 20년 미만 거주자가 약 62%(77명)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40년 미만은 약 21%(26명), 40년 이상 60년 미만이 11%(14명), 60년 이상 80년 미만이 약 6%(7명), 80년 이상이 약 1%(1명)로 나타났다(표1-4).

전체 응답자의 약 13%(16명)가 1인 가구로 확인됐고, 4명 이상 가구가 약 29%(36명)로 가장 많았다(표1-5).

대피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7%(83명)가 대피를 경험했다(표1-6).

수해 이전 건강 상태는 전체의 47%(50명)가 ‘좋았다(조금 좋았다 혹은 매우 좋았다)’로, 12%(16명)는 ‘나빴다(조금 나빴다 혹은 매우 나빴다)’로 응답했다(표1-7).

[문항별 응답표]

표 1-1. 귀하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사례수)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125 ¹⁴ (100.0%)	16 (12.8%)	46 (36.8%)	60 (48.0%)	3 (2.4%)

표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남성	여성
126 ¹⁵ (100.0%)	80 (63.5%)	46 (36.5%)

표 1-3. 귀하는 발생한 재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복수응답)

주택	생계수단	영업장	본인신체	기타
----	------	-----	------	----

¹¹ 전체 응답자 128명 중 3명 결측 확인함.

¹² 연령 구분은 통계청의 연령계층 구분과 고령 연구에서 사용되는 초고령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40~59세를 중년, 60~79세를 장년/노년, 80세 이상을 초고령으로 재구성함

¹³ 농업, 어업, 임업, 서비스업, 등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얻는 일

¹⁴ 전체 응답자 128명 중 1명 결측 확인함.

¹⁵ 전체 응답자 128명 중 2명 결측 확인함.

54	85	73	12	1
----	----	----	----	---

표 1-4. 해당 마을에서 실제 거주 기간을 합하면 총 몇 년입니까?

(사례수)	20년 미만	2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60년 미만	60년 이상 80년 미만	80년 이상
125 (100.0%)	77 (61.6%)	26 (20.8%)	14 (11.2%)	7 (5.6%)	1 (0.8%)

표 1-5. 재해 이전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함께 거주한 사람의 수는 몇이었습니까? (본인 제외)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125 (100.0%)	16 (12.8%)	30 (24.0%)	26 (20.8%)	17 (13.6%)	36 (28.8%)

표 1-6. 귀하는 올해 재해를 피해 살던 주거지를 떠나 대피했습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124 (100.0%)	83 (66.9%)	41 (33.1%)

표 1-7. 재해 이전 귀하의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사례수)	매우 나빴다	조금 나빴다	보통이었다	조금 좋았다	매우 좋았다
126 (100.0%)	3 (2.4%)	13 (10.3%)	50 (39.7%)	23 (18.3%)	37 (29.4%)

2. 수해의 물적 피해

2장은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물적·신체적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는 행정기관의 수해 피해 평가가 실제 손실을 산정하는데 적절했는지, 또 현실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택·영업장·가재도구 등 항목별 피해 체감 정도와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에 대한 체감도, 그리고 본인 및 가족·지인의 신체적 피해 현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담았다.

[전체 물적 피해]

전체 응답자 78명 중 약 45%(35명)가 주택 피해를 극심한 수준(80% 이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다(표2-1-1).

특히, 1장의 수해 피해 분류(표1-3)에서 생계수단 피해(85건), 영업장 피해(73건), 주택 피해(54건)로 대답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 피해에 더해 생계수단과 영업장까지 전반에 걸쳐 피해를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장(농장, 공장, 상점, 농기구 등)피해는 응답자 중 약 55%(67명)가 80% 이상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표2-1-2).

[문항별 응답표]

표 2-1. 재해로 인한 귀하의 물적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재해 이전의 상태에 비추어 귀하가 체감하시는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0~100% 사이로 응답해 주세요

표 2-1-1. 주택 피해 정도는 몇 %입니까? (재해 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 단위로 기입)

(사례수)	20% 미만 ¹⁶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78 (100.0%)	18 (23.1%)	14 (17.9%)	5 (6.4%)	6 (7.7%)	35 (44.9%)

표 2-1-2. 영업장(농장, 공장, 상점, 농기구 등)의 피해정도는 몇 %입니까? (재해 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 단위로 기입)

(사례수)	20% 미만 ¹⁷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22 (100.0%)	3 (2.5%)	15 (12.3%)	16 (13.1%)	21 (17.2%)	67 (54.9%)

[일상의 물적 피해]

¹⁶ 20%미만 응답자중 10명은 피해를 입지 않음.

¹⁷ 20%미만 응답자중 3명은 피해를 입지 않음.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피해 평가에서 제외되어 보상되지 않는 가전제품, 가구, 옷 등의 가재도구, 그리고 물적으로 복구될 수 없어 정서적 상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가족의 추억이 깃든 물품을 조사 문항에 포함했다.

가재도구 관련 답변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93명 중 61%(57명)가 80% 이상 극심한 피해 체감으로 응답하여, 주택 피해만큼 체감도가 높은 물적 피해에 해당했다(표2-1-3).

추억이 깃든 물품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 79명 중 약 60%(47명)가 80% 이상 극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대답하여 체감 피해의 일관성이 확인된다(표2-1-4).

[문항별 응답표]

표 2-1-3. 가재도구(가전제품, 가구, 옷 등)의 피해정도는 몇 %입니까? (재해 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 단위로 기입)

(사례수)	20% 미만 ¹⁸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3 (100.0%)	12 (12.9%)	8 (8.6%)	10 (10.8%)	6 (6.5%)	57 (61.3%)

표 2-1-4. 추억이 깃든 물건(사진, 편지, 일기장, 기념품 등)의 피해 정도는 몇 %입니까? (재해 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 단위로 기입)

(사례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79 (100.0%)	19 (24.1%)	7 (8.9%)	2 (2.5%)	4 (5.1%)	47 (59.5%)

[행정기관 피해 평가 체감도]

주택장, 영업장, 가재도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자가평가와 무엇이 달랐는지 묻는 항목에선, 3개 항목 모두에서 응답자 70% 이상이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고 응답했다.

주택의 경우, 응답자 81명 중 약 72%(58명)가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밝혔다(표2-2-1).

영업장 피해 평가의 경우는 응답자의 약 76%(91명)가 과소평가됐다고 응답했고(표2-2-2), 가재도구의 경우 약 79%(73명)가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응답했다(표2-2-3).

위 결과를 미루어 보아, 응답자의 70% 이상이 행정 평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행정 지침이 주민들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타격을 충분히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의 보상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항별 응답표]

표 2-2-1.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는, 귀하의 평가와 비교해 어떠했습니까? [주택]

(사례수)	행정기관이	비슷했다	행정기관이
-------	-------	------	-------

¹⁸ 20%미만 응답자중 7명은 피해를 입지 않음.

	과소평가했다		과대평가했다
81 (100.0%)	58 (71.6%)	23 (28.4%)	0 (0.0%)

표 2-2-2.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는, 귀하의 평가와 비교해 어떠했습니까?
[영업장(농지, 공장, 상점, 농기구 등)]

(사례수)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비슷했다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120 (100.0%)	91 (75.8%)	29 (24.2%)	0 (0.0%)

표 2-2-3.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는, 귀하의 평가와 비교해 어떠했습니까?
[가재도구(가전제품, 가구, 옷 등)]

(사례수)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비슷했다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93 (100.0%)	73 (78.5%)	20 (21.5%)	0 (0.0%)

[신체적 피해]

2025년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사망 사고¹⁹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 만큼,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 친척, 지인(이웃)의 신체적 피해 경험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수해로 인한 본인의 신체 피해(복수응답)는 기존 질환 악화 5건, 부상·질병 발생 17건으로 나타났다(표2-3-1). 가족 및 친척 피해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8건(가족 6건, 친척 2건), 부상·질병 발생 8건(가족 7건, 친척 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3건, 부상·질병 발생 4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 응답자 중 3명이 지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고 응답했다(표2-3).

[문항별 응답표]

표 2-3. 재해로 인해 귀하를 포함한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해당 사항 없음	기존 질환의 악화	부상, 질병발생	사망, 실종	잘 모름 ²⁰
본인	102	5	17	0	0
가족	89	6	7	0	1
친척	73	2	1	0	3
지인	67	3	4	3	4

¹⁹ 2025년 7월 22일에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인명피해 총 19명(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
출처 : 산청군 호우피해복구 지원현황 2025년 8월 14일

<https://www.sancheong.go.kr/www/contents.do?key=6819>

²⁰ 가족, 친척, 지인이 관련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선택

3. 수해 직후 대피

3장은 수해 발생 당시 피해 주민들의 대피 과정과 임시 거주 단계에서의 행정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재난문자 수신 여부와 대피 정보 전달 경로, 대피 수단, 임시 대피소 및 임시 거주지에서의 물품 지원과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재난 초기의 행정 대응이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 생활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대피 방법 및 수단]

수해나 대형 산불 같은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시군구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초기 대응 중 하나다. 대피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망, 부상 같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이다. 재난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발적일 경우, 소방과 경찰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모든 현장에 구조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응답 결과, 이번 수해 때 피해자들은 재난문자를 통해 대피 방법 등의 정보를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122명 중 76%(93명)가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답했고(표3-1),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대피 방법을 확인한 경로별 응답도 재난문자가(70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 방송(39건)이었다. TV·라디오나 공무원을 통한 정보 전달(16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3-2). 응답자 중 약 24%(29명)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표3-1). 이는 통신 장애, 정전 혹은 전송 시스템의 공백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상황을 전파하는 데 벌어지는 장애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피 수단으로는 자가용(64%, 74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됐다(표3-3). 차량으로 대피한 응답자들의 차량 이용 방식을 보면, 본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약 84%로 가장 많았고, 기타(6%), 가족이나 친척 차량(5%), 마을 주민 차량(약 4%) 순이었다. 경찰·소방·구급 등 공공 구조 차량은 1%에 불과했다(표3-4). 주민들이 공공의 구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탈출로를 찾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재난 초기 커뮤니티 방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해 상황에서 자가용 대피나 도보 탈출 시 도로 침수, 고립, 차량 정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한편, 응답자 중 78%(96명)가 수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표3-5). 정보 전달의 불확실성(약 24% 미수신)과 공적 구조 수단의 부재(대부분 자력 대피)가 결합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피 지시 단순히 '대피하라'는 문구를 넘어, '어느 길로, 어떤 수단을 이용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이런 가이드가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서 행정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항별 응답표]

표 3-1. 재해 당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재난문자를 받으셨습니까?

(사례수)	받았다	받지 못했다
122 (100.0%)	93 (76.2%)	29 (23.8%)

표 3-2. 재해 당시 대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수응답)

재난문자	TV,라디오	마을 방송	마을 주민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통해 직접	기타	듣지 못했다
70	9	39	20	7	1	24

표 3-3. 구조되거나 대피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수단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사례수)	자가용	도보	농기계	대피안함	기타
115 (100.0%)	74 (64.3%)	30 (26.1%)	2 (1.7%)	2 (1.7%)	7 (6.1%)

표 3-4.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셨다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었습니까?

(사례수)	본인의 차	마을 주민의 차	가족이나 친척의 차	경찰 소방 구급 등 공공 구조차량	기타
79 (100.0%)	66 (83.5%)	3 (3.8%)	4 (5.1%)	1 (1.3%)	5 (6.3%)

표 3-5. 재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123 (100.0%)	96 (78.0%)	27 (22.0%)

[임시 대피소 경험 및 평가]

임시 대피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위험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시설²¹로, 재난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주민 대다수가 맨 처음 모이는 공간이다.

실태조사팀은 2025년 수해에 앞선 많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임시 대피소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왔다. 이에, 임시 대피소에서 진행되는 물품 공급의 신속성, 적절성, 공정성을 평가하고 임시 대피소 이동 횟수 등 대피 기간에 경험한 일들을 조사하여,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영되어야 할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 재난 현황 및 피해 복구 지원 절차 등 피해 주민들의 심신 안정과 차후 대책 수립이 긴요한 정보의 제공 적절성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124명 중 32%(40명)가 주거지를 떠난 직후부터 임시 대피소에 머물렀다고 응답했고 약 68%(84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표3-6). 수해로 인해 주택 피해보다 딸기 하우스 같은 영업장이나 생계시설 피해가 더 컸으므로 임시 대피소를 이용하는 대피율이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²¹ 행정안전부 재난대피시설 운영·관리 지침

임시 대피소에 체류한 피해 주민(40명) 중 60%가 한 차례 이상 대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회 이동한 비율이 30%로 높았고, 4회 이상 옮긴 비율도 약 3%에 달했다(표3-7). 두 번 이상 이동한 비율을 합치면 약 40%에 달한다. 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거처 이동은 피해 주민의 피로도를 극대화하고 정보 전달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임시 대피소 유형(복수응답)별 응답을 보면 마을회관(25건)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학교(9건), 기타(7건), 숙박업소(5건), 경로당(5건) 순으로 나타났다(표3-8). 체육관, 학교 같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집 인근 마을회관이 대피소로 주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문항별 응답표]

표 3-6. 주거지에서 대피한 후, 임시대피소에 거주하십니까?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124 (100.0%)	40 (32.3%)	84 (67.7%)

표 3-7. 총 몇번 임시대피소를 옮겼습니까?

(사례수)	0번	1번	2번	3번	4번 이상
40 (100.0%)	16 (40.0%)	8 (20.0%)	12 (30.0%)	3 (7.5%)	1 (2.5%)

표 3-8. 귀하가 머물렀던 임시대피소는 다음 중 어디에 마련되었습니까? (복수응답)

마을회관	학교	숙박업소	경로당	기타
25	9	5	5	7

[임시 대피소 보급 물품별 평가]

재난 피해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 체류 경험은 ‘재난 속 작은 재난’의 연속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행정기관별 재난 경험 이력에 따라 행정 대응 체계, 지원 서비스, 보급 물품의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주민들의 만족도나 편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이나 심리적 피해까지 초래하게 된다. 실태조사팀은 임시 대피소 체류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품으로 침구류, 세면도구, 수건, 옷, 여성용품, 의약품, 물, 음식, 사생활 보호 용품(칸막이, 텐트 등), 기반시설(전기, 냉난방 등)을 선정하고, 이의 제공이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물품 중 물이 세 가지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긍정(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응답을 보였다(신속성 약 41%, 공정성 약 41%, 적절성 약 41%). 음식은 적절성(약 41%)에서 긍정 응답을 얻었으나 신속성(약 39%), 공정성(약 36%)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용품은 여성 응답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항목 모두 부정(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신속성 약 89%, 공정성 약 89%, 적절성 80%) 긍정 응답은 전혀 없었다(표3-9). 이는 재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긴급 구호 체계가 사실상 없었음을 의미한다.

침구류는 세 항목 모두에서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나 특히 신속성이 부정 응답이 높았다(신속성 약 53%, 공정성 52%, 적절성 약 45%). 옷은 세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 중 적절성의 부정적 평가가 조금 더 높았다(신속성 약 50%, 공정성 약 53%, 적절성 55%, 표3-9). 젖거나 오염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수해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복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의 경우 전체 물품 중 부정 응답이 신속성 약 62%, 공정성 59%, 적절성 59%이고, 사생활 보호는 부정 응답이 신속성 약 63%, 공정성 약 60%, 적절성 약 62%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기반시설(전기, 냉난방 등)은 공정성(약 49%)과 적절성(51%)에서 절반 안팎이 부정적이었으나 신속성(약 54%)은 이보다 높았다. 사생활 보호(칸막이, 텐트 등)의 경우는 신속성(약 63%)의 부정 응답이 전체 물품 평가에서 가장 높았다.

[문항별 응답표]

표 3-9. 임시대피소에 머물면서 필요한 물품(침구, 세면도구, 수건, 옷 등)을 보급하는 과정에 대해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물품	평가항목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옷	신속성	38 (100.0%)	18 (47.4%)	1 (2.6%)	14 (36.8%)	2 (5.3%)	3 (7.9%)
	공정성	38 (100.0%)	19 (50.0%)	1 (2.6%)	13 (34.2%)	1 (2.6%)	4 (10.5%)
	적절성	38 (100.0%)	19 (50.0%)	2 (5.3%)	13 (34.2%)	1 (2.6%)	3 (7.9%)
침구류	신속성	38 (100.0%)	17 (44.7%)	3 (7.9%)	12 (31.%)	2 (5.3%)	4 (10.5%)
	공정성	38 (100.0%)	18 (47.4%)	2 (5.3%)	11 (28.9%)	3 (7.9%)	6 (15.8%)
	적절성	38 (100.0%)	16 (42.1%)	1 (2.6%)	12 (31.6%)	4 (10.5%)	5 (13.2%)
위생용품	신속성	40 (100.0%)	14 (35.0%)	5 (12.5%)	14 (35.0%)	2 (5.0%)	5 (12.5%)
	공정성	40 (100.0%)	11 (27.5%)	4 (10.0%)	15 (37.5%)	3 (7.5%)	7 (17.5%)
	적절성	39 (100.0%)	10 (25.6%)	4 (10.3%)	14 (35.9%)	3 (7.7%)	8 (20.5%)
여성용품	신속성	9 (100.0%)	8 (88.9%)	0 (0%)	1 (11.1%)	0 (0.0%)	0 (0.0%)
	공정성	9 (100.0%)	8 (88.9%)	0 (0%)	1 (11.1%)	0 (0.0%)	0 (0.0%)
	적절성	10 (100.0%)	8 (80.0%)	0 (0.0%)	2 (20.0%)	0 (0.0%)	0 (0.0%)
의약품	신속성	37 (100.0%)	19 (51.4%)	4 (10.8%)	10 (27.0%)	1 (2.7%)	3 (8.1%)
	공정성	37 (100.0%)	19 (51.4%)	3 (8.1%)	11 (29.7%)	1 (2.7%)	3 (8.1%)
	적절성	37 (100.0%)	19 (51.4%)	3 (8.1%)	10 (27.0%)	1 (2.7%)	4 (10.8%)
물	신속성	39 (100.0%)	12 (30.8%)	1 (2.6%)	10 (25.6%)	7 (17.9%)	9 (23.1%)

	공정성	39 (100.0%)	12 (30.8%)	1 (2.6%)	10 (25.6%)	7 (17.9%)	9 (23.1%)
	적절성	39 (100.0%)	10 (25.6%)	2 (5.1%)	11 (28.2%)	7 (17.9%)	9 (23.1%)
음식	신속성	39 (100.0%)	15 (38.5%)	1 (2.6%)	8 (20.5%)	7 (17.9%)	8 (20.5%)
	공정성	39 (100.0%)	13 (33.3%)	1 (2.6%)	11 (28.2%)	6 (15.4%)	8 (20.5%)
	적절성	39 (100.0%)	12 (30.8%)	3 (7.7%)	8 (20.5%)	7 (17.9%)	9 (23.1%)
기반 시설	신속성	35 (100.0%)	15 (42.9%)	4 (11.4%)	6 (17.1%)	2 (5.7%)	8 (22.9%)
	공정성	37 (100.0%)	14 (37.8%)	4 (10.8%)	7 (18.9%)	2 (5.4%)	8 (21.6%)
	적절성	35 (100.0%)	14 (40.0%)	4 (11.4%)	6 (17.1%)	3 (8.6%)	8 (22.9%)
사생활 보호	신속성	35 (100.0%)	19 (54.3%)	3 (8.6%)	8 (22.9%)	2 (5.7%)	3 (8.6%)
	공정성	35 (100.0%)	18 (51.4%)	3 (8.6%)	8 (22.9%)	3 (8.6%)	3 (8.6%)
	적절성	35 (100.0%)	18 (51.4%)	4 (10.8%)	8 (24.3%)	2 (5.7%)	3 (8.1%)

[임시 대피소 생활 만족도와 불편사항]

임시 대피소 생활 만족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 40명 중 부정 응답(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혹은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비율과 긍정 응답(대체로 만족했다 혹은 매우 만족했다) 비율 모두 4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표3-10).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 1순위로 선택한 내용을 보면 세면/샤워 등의 어려움(9건), 협소한 공간(9건), 식사의 어려움(4건), 낯선 사람과의 공존,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의 답답함(각 2건) 등의 빈도로 답했다(표3-11).

임시 대피소에서 행정기관이 시행한 정보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약 54%(21명)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표3-12). 피해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며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한다. 응답 주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행정기관이 이러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부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심신 안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문항별 응답표]

표 3-10. 임시대피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40 (100.0%)	12 (30%)	4 (10.0%)	7 (17.5%)	12 (30.0%)	4 (10.0%)

표 3-11. 임시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협소한 공간	소음과 불빛	물품의 부족	식사의 어려움	낮선 사람들과의 공존	세면/샤워 등 어려움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 답답함	편의 시설 부족	없음	기타
9	1	0	4	2	9	2	2	0	8	1

[가중치 환산표: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표3-11)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최대 3개까지 복수 응답으로 받아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세면/샤워 어려움(41점)이 1위였으며, 협소한 공간(32점), 식사의 어려움(18점),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14점), 낮선 사람과 공존(13점), 물품 부족(8점) 이 뒤를 이었다.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도 24점에 달했다(분석표 3-2).

구분	협소한 공간	소음과 불빛	물품의 부족	식사의 어려움	낮선 사람들과의 공존	세면/샤워 등 어려움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 답답함	편의 시설 부족	없음	기타
가중치	32	5	8	18	13	41	14	7	2	24	4
1순위	9	1	0	4	2	9	2	2	0	8	1
2순위	1	1	4	2	3	5	4	0	0	0	0
3순위	3	0	0	2	1	4	0	1	2	0	1

<분석표 3-2> 표 3-11 임시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표 3-12. 임시대피소에 머무를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현황, 복구현황, 보상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적절했습니까,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사례수)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39 (100.0%)	17 (43.6%)	4 (10.3%)	4 (10.3%)	14 (35.9%)	0 (0.0%)

[임시 대피소 외 임시 거주지 실태 평가]

임시 대피소 밖에 머문 응답자들도 수해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 대피 장소 선택과 물품 지원 현황을 함께 조사했다.

수해 대피 당시 임시 대피소가 아닌 다른 임시 거주지로 대피한 사람은 82명이었으며, 본인의 다른 집을 선택한 경우가 약 48%(39명)로 가장 많았고, 기타(약 38%, 31명)와 가족이나 친척 집(약 20%, 16명)이 뒤를 이었다(표3-13). 기타의 경우는 인근 모텔이나 숙박시설로 대피한 경우가 많았다.

대피소 대신 다른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대피소 시설이 불편해서가 약 23%(17명)였고, 대피소 접근성이 멀어서(약 19%, 14명),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9%, 7명), 생업의 이유(8%, 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도 41%(31명)에 달했다(표3-14).

임시 거주지에서 물품 지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78명 중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약 66%)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약 14%)의 네 배를 넘었다(표3-15). 구호 물품 배분이 '대피소 입소자' 위주로만 이루어져서, 외부 거주 피해 주민들은 식수나 생필품 지원에서 소외되었다.

정보 제공을 충분히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또한 응답자 78명 중 부정 답변이 60%, 긍정 답변이 16%로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표3-16). 대피소가 아닌 곳에 머물더라도 '피해 주민'임은 변함없으나, 지원과 정보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정보 격차로 인해 이들은 복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문항별 응답표]

표 3-13. 귀하가 임시대피를 위해 이동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례수)	가족·친척 집	본인의 다른 집	지인 집	대피 안함	기타
82 ²² (100.0%)	16 (19.5%)	39 (47.6%)	8 (9.8%)	2 (2.4%)	31 (37.8%)

표 3-14. 임시대피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사례수)	대피소 시설의 불편함	가족·친척의 권유	생업	대피소의 접근성	기타
75 ²³ (100.0%)	17 (22.7%)	7 (9.3%)	6 (8.0%)	14 (18.7%)	31 (41.3%)

표 3-15. 임시주거지에서도 물품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8 ²⁴ (100.0%)	31 (39.7%)	20 (25.6%)	16 (20.5%)	10 (12.8%)	1 (1.3%)

표 3-16. 임시주거지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까?

²² 임시대피소로 이동한 84명 중 2명 결측 발생함.

²³ 임시대피소로 이동한 84명 중 9명 결측 발생함.

²⁴ 임시대피소로 이동한 84명 중 6명 결측 발생함.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8 ²⁵ (100.0%)	32 (41.0%)	15 (19.2%)	18 (23.1%)	12 (15.4%)	1 (1.3%)

²⁵ 임시대피소로 이동한 84명 중 6명 결측 발생함.

4. 임시주택

수해로 거주지가 침수됐거나 거주가 불가해진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 체류 이후 임시주택에 머물게 된다. 임시주택은 피해 주민들이 주거 회복 과정에서 일상을 재개하는 주요 생활 공간이다. 불안정한 임시 대피소 생활의 피로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 단위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4장에서는 임시주택 거주 경험의 만족도,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해 임시주택 단계에서의 주거 지원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번 조사 기간은 임시주택 거주가 진행 중인 시기였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의 응답이 완료형 의견은 아닌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시주택이 임시거주지의 형태로 임대주택과 기타 임시주거지가 포함되었다.

[임시주택 거주 만족도 및 제공 기간]

2025년 10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26명 중 약 10%(12명)가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고 약 91%(114명)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표4-1). 임시주택 거주자 중 50%(6명)는 마을과 먼 임시주택 단지에, 33%(4명) 마을에 가까운 임시주택 단지에 머물고 있었고, 나머지 약 17%(2명)는 수해 이전에 살던 집터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표4-2).

임시주택 생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스럽지 않거나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부정 응답 비율이 50%로 절반이었으며,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은 8%에 그쳤다(표4-3).

불편 사항(복수응답)별 응답 건수를 보면 내부 시설(6건), 환기나 통풍(2건), 사생활 보호(2건), 좁은 공간(1건), 이웃의 소음(1건) 순이었다(표4-4). 임시주택의 불편함은 기능적 부실에 집중되어 있다.

임시주택 제공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가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나 6개월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 모두 27%로 같았다(표4-5).

[문항별 응답표]

표 4-1. 현재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126 (100.0%)	12 (9.5%)	114 (90.5%)

표 4-2. 현재 임시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사례수)	마을에 가까운 임시주택단지	수해 이전에 살던 집터	마을과 먼 임시주택단지
12 (100.0%)	4 (33.3%)	2 (16.7%)	6 (50.0%)

표 4-3.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2 (100.0%)	3 (25.0%)	3 (25.0%)	5 (41.7%)	1 (8.3%)	0 (0.0%)

표 4-4. 임시주택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이웃의 소음	환기/통풍	내부시설(냉난방, 인덕션, 전기온수기 등)	좁다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1	2	6	1	2

표 4-5. 임시주택 제공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2년 이상	1년 6개월~2년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6개월 미만
11 ²⁶ (100.0%)	3 (27.3%)	2 (18.2%)	0 (0.0%)	3 (27.3%)	3 (27.3%)

[임시주택 외 거주 응답자]

임시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114명, 표4-1)를 상대로 이유에 관해 확인한 결과, 84%(96명)는 본인 집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 살게 돼서(약 4%), 집이 있어서(약 4%)로 나타났다(표4-6).

임시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며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109명이 응답했는데, ‘불편이 없다’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고, 물품 제공에서의 소외 8%, 고립감 등 심리적 고통 7%, 기반시설의 불편함 6% 순으로 응답했고 기타도 약 14%가 되었다(표4-7).

[문항별 응답표]

표 4-6. 임시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본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어서(소파·반파)	가족/지인과 살게 돼서	임시주택단지가 싫어서	집이 있음	기타
114 (100.0%)	96 (84.2%)	4 (3.5%)	2 (1.8%)	4 (3.5%)	8 (7.0%)

표 4-7. 임시주택이 아닌 거주지에 머물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²⁶ 임시주택 거주자 12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사례수)	불편이 없다	물품 제공에서의 소외	고립감 등심리적 고통	기반시설 이용 불편함	기타
109 ²⁷ (100.0%)	70 (64.2%)	9 (8.3%)	8 (7.3%)	7 (6.4%)	15 (13.8%)

²⁷ 임시주택 거주자 114명 중 5명 결측 발생함.

5. 수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5장은 수해 이후 심리적인 영향과 응답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인 IES-R-K(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총 22문항)를 활용했다. 이 척도는 재난 및 재해를 떠올렸을 때 나타나는 침습²⁸, 회피, 과각성 반응 등을 기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5장에서 다루는 문항 조사의 결과는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이윤호 소장의 기술 분석과 자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조사 역시 다른 설문과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직접 문항에 답변하는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전문의의 면담을 통한 임상적 진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 상태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더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TSD는 의학적 진단명인 만큼, 본 분석에서는 'PTSD 위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라는 용어로 기술했다.

[전체 IES-R-K 척도 검사 결과]

전체 응답자 126명의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심각한 PTSD 위험' 점수 범위에 속한다. 응답자의 약 69%(87명)가 PTSD 위험 범위(25점 이상)에 속하며, 이 중 55%(70명)는 40점 이상으로 '심각한' 혹은 '매우 심각한' PTSD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범위(0~17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약 20%(25명)에 불과해, 수해를 겪은 주민 대다수가 높은 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TSD 등급 수준 ²⁹	점수 범위	인원	비율
정상 (증상 없음)	0~17점	25	19.8%
PTSD 위험 경향성	18~24점	14	11.1%
부분 PTSD 위험	25~39점	17	13.5%
심각한 PTSD 위험	40~59점	38	30.2%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60점 이상	32	25.4%
합계		126	100%

<분석표 5-1>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N=126). 선행연구(은헌정, 2005)의 기준에 따라 25점 이상을 PTSD 위험군으로 분류했으며, 25점 미만(정상 및 위험 경향성)은 위험군에 포함하지 않았음. 위험군 중 40점 이상은 심각한 PTSD 위험군으로 구분함.

[주요 요인별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²⁸ 외상 경험과 관련된 기억·생각·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떠오르는 현상'으로 외상 사건의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기억, 외상 관련 악몽, 플래시백(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에 대한 강한 심리적 고통, 관련 자극에 대한 강한 생리적 반응(심장 두근거림, 땀, 공포 반응 등)을 포함한다.

²⁹ 선행연구에 따라 PTSD 등급 구분함;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and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 - 310.

본 조사는 다각적인 통계적 검증(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여, 심리적 외상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이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을 분석했다(분석표5-5).

분석 결과, 산청 수해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 당시의 생명 위협 경험과 사후의 경제적 회복 정도, 그리고 실질적인 물적 피해 규모이다. 또한, 행정 기관의 보상 및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만족도를 넘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PTSD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재난 정책은 물적 복구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소통과 경제적 자립 지원 역시 심리 방어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요인		내용	영향
개인 특성	인구학적 요인	연령	고연령층 집단에서 PTSD 고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재난경험요인	수해 당시 경험	생명 위협	생명 위협을 느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PTSD 위험 점수가 약 12점 높음.
행정사회적 요인	행정 평가	물적피해 평가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실제보다 낮다고 느낄수록 PTSD 위험 심화
피해 및 보상	소득 및 회복 기대	주관적 경제회복	경제회복 수준이 높을 수록 PTSD 위험 점수는 낮음
	피해 규모	물적 피해액	피해 규모가 클수록, PTSD 위험 심화 및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분석표 5-2> 주요 요인별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영향 분석 결과

1) 인구학적 요인: 연령

평균 연령과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놓고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³⁰ 반면에 매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60점 이상)이 나타난 연령(57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 규모와 PTSD 위험

주택, 영업장, 가재도구 등 물적 피해가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클수록 정신적 외상 반응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³¹

3) 수해 당시 경험: 대피, 생명위협, 대피소

응답자의 78%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표3-5), 재난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점수가 평균 약 12점 더 높게 나타나

³⁰ PTSD 위험 등급 증상없음의 평균연령이 55세, 경향성 57세, 부분 PTSD 58세, 심한 PTSD 61세

³¹ 위계적 회귀 분석 방법 활용 (B=0.194, p=0.042, β=0.233) 수해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적으로 약 0.19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결정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피 경험과 임시대피소 거주 경험 비율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 정보 제공, 구호 서비스 만족도 및 공정성

피해 평가, 복구지원비, 성금, 향후 복구 계획 등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물품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행정 경험이 부정적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호자원 배분의 공정성 인식이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경험이 무력감, 분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해에 대한 경험을 잊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행정 대응 신뢰: 피해사실 합리성, 복구지원비 충분성, 차별 경험

피해 사실 조사의 합리성이나 복구지원비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모두 부정으로 나타나, 행정 대응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는 감각이 강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6) 소득 회복 정도와 회복 기대

소득 회복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경제 회복 정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혔다.

7) 공동체 갈등과 회복

수해 복구 과정에서의 공동체 갈등 경험이나 목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악화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회복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항별 응답표]

표 5-1. 그 사건(수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5 (100.0%)	9 (7.2%)	24 (19.2%)	23 (18.4%)	33 (26.4%)	36 (28.8%)

표 5-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26 (100.0%)	21 (16.7%)	28 (22.2%)	23 (18.3%)	32 (25.4%)	22 (17.5%)
-----------------	---------------	---------------	---------------	---------------	---------------

표 5-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16 (12.7%)	15 (11.9%)	28 (22.2%)	32 (25.4%)	35 (27.8%)

표 5-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22 (17.5%)	25 (19.8%)	21 (16.7%)	30 (23.8%)	28 (22.2%)

표 5-5.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5 (100.0%)	30 (24.0%)	27 (21.6%)	22 (17.6%)	21 (16.8%)	25 (20.0%)

표 5-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21 (16.7%)	21 (16.7%)	20 (15.9%)	29 (23.0%)	35 (27.8%)

표 5-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25 (19.8%)	19 (15.1%)	23 (18.3%)	30 (23.8%)	29 (23.0%)

표 5-8.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32 (25.4%)	21 (16.7%)	23 (18.3%)	32 (25.4%)	18 (14.3%)

표 5-9. 그 사건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9	22	23	35	27

(100.0%)	(15.1%)	(17.5%)	(18.3%)	(27.8%)	(21.4%)
----------	---------	---------	---------	---------	---------

표 5-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33 (26.2%)	20 (15.9%)	19 (15.1%)	25 (19.8%)	29 (23.0%)

표 5-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27 (21.4%)	18 (14.3%)	23 (18.3%)	29 (23.0%)	29 (23.0%)

표 5-12. 나는 그 사건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쓰고 싶지 않았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19 (15.1%)	19 (15.1%)	31 (24.6%)	36 (28.6%)	21 (16.7%)

표 5-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54 (42.9%)	23 (18.3%)	22 (17.5%)	17 (13.5%)	10 (7.9%)

표 5-14. 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39 (31.0%)	27 (21.4%)	29 (23.0%)	16 (12.7%)	15 (11.9%)

표 5-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34 (27.0%)	29 (23.0%)	16 (12.7%)	27 (21.4%)	20 (15.9%)

표 5-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5 (100.0%)	32 (25.6%)	19 (15.2%)	20 (16.0%)	32 (25.6%)	22 (17.6%)

표 5-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5 (100.0%)	34 (27.2%)	22 (17.6%)	28 (22.4%)	20 (16.0%)	21 (16.8%)

표 5-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35 (27.8%)	23 (18.3%)	22 (17.5%)	24 (19.0%)	22 (17.5%)

표 5-19.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땀, 호흡곤란, 오심,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46 (36.5%)	24 (19.0%)	18 (14.3%)	21 (16.7%)	17 (13.5%)

표 5-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꾸 적이 있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47 (37.3%)	25 (19.8%)	14 (11.1%)	25 (19.8%)	15 (11.9%)

표 5-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5 (100.0%)	49 (39.2%)	21 (16.8%)	21 (16.8%)	18 (14.4%)	16 (12.8%)

표 5-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6 (100.0%)	39 (31.0%)	21 (16.7%)	26 (20.6%)	24 (19.0%)	16 (12.7%)

[심리지원 서비스의 실태 및 평가]

수해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상담, 마음치료 등 다양한 명칭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본 조사는 이렇게 행정기관이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전체 응답자 123명 중 대부분(94%)이 행정기관이 제공한 수해 관련 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약 6%(7명)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표5-23). 심리지원을 받지 않은 응답자 중 37%는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몰라서라고 답했다.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심리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약 3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IES-R-K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PTSD 고위험군이 많았다. 그럼에도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며, 이는 심리지원 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알더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원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응답은 18%였으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였다(표5-27).

심리지원 서비스받은 응답자 6명 중 50%는 긍정적으로(대체로 효과적이다 혹은 매우 효과적이다) 응답했지만 17%는 부정적으로(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혹은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 응답하였다(표5-25). 심리지원이 얼마나 오래 제공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심리지원 경험자 7명 중 절반 이상(57%)이 한 달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표5-26). 심리지원 형식의 주된 방식은 1:1 대화 상담(43%)과 집단 상담(43%)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5-24).

[문항별 응답표]

표 5-23. 수해 피해 관련 심리지원(마음상담, 마음치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수)	있음	없음
123 (100.0%)	7 (5.7%)	116 (94.3%)

표 5-24. 심리지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례수)	상담사와 1:1 대화	상담사와 집단 대화	상담사와 1:1 대화, 집단상담
7 (100.0%)	3 (43%)	3 (43%)	1 (14%)

표 5-25. 심리지원은 효과적이었습니까?

(사례수)	매우 효과적이지 않았다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효과적이었다	매우 효과적이었다
6 ³² (100.0%)	1 (17%)	0 (0%)	2 (33%)	3 (50%)	0 (0%)

표 5-26. 재난 이후 심리지원은 얼마나 오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례수)	장기간(1년 이상) 이어질 필요가 있다	몇 달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몇 주 내)으로 충분하다	잘 모르겠다
7 (100.0%)	1 (14.3%)	4 (57.1%)	1 (14.3%)	1 (14.3%)

표 5-27. 심리지원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³² 심리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 7명중 1명 결측 발생함.

(사례수)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심리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원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기타
116 (100.0%)	43 (37.1%)	39 (33.6%)	21 (18.1%)	4 (3.4%)	9 (7.8%)

6. 재난 지원

6장은 재난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 경로와 만족도, 구호 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한 평가, 성금 배분 관련 인식, 그리고 현재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했는지, 공식 행정 채널의 역할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지원이 먼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정보 전달 및 구호 서비스 평가]

수해가 발생한 7월부터 3개월이 지난 조사 시점(10월)까지 피해 평가, 복구 지원비, 구호금, 복구 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받았는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의 응답 건수를 보면 이장을 통한 전달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웃(32건), 문자·우편·전화(14건), 공무원을 통한 직접 전달(14건)이 뒤를 이었다. 아예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응답 19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6-1).

정보 제공 만족도는 피해 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 복구 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 5개 항목 모두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았거나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 평가에 대해서는 약 69%가 부정 응답(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혹은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을 선택했다. 복구지원비 정보 제공에 대한 부정 응답은 약 75%였고, 구호금 정보 제공은 약 73%였다.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만족도도 부정 응답이 약 74%를 차지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제공의 만족도 역시 부정 응답이 약 66%였다(표6-2).

응답자 대부분 자신이 받을 보상액 규모 및 지급 시점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인식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표]

표 6-1. 재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난피해회복과 관련한 정보(피해평가, 복구지원비, 보상액, 구호금, 복구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이장을 통해 들었다	문자 메시지, 우편, 개인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공고문, 책자 등을 통해 받았다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못들었다	기타
32	44	14	2	14	19	8

표 6-2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피해평가	126 (100.0%)	61 (48.4%)	26 (20.6%)	23 (18.3%)	15 (11.9%)	1 (0.8%)
복구 지원비	125 (100.0%)	63 (50.4%)	31 (24.8%)	17 (13.6%)	13 (10.4%)	1 (0.8%)
구호금	124 (100.0%)	62 (50.0%)	29 (23.4%)	18 (14.5%)	14 (11.3%)	1 (0.8%)
향후복구계획	126 (100.0%)	63 (50.0%)	30 (23.8%)	23 (18.3%)	9 (7.1%)	1 (0.8%)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124 (100.0%)	60 (48.4%)	22 (17.7%)	27 (21.8%)	11 (8.9%)	4 (3.2%)

[임시 대피 기간 이후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해 전체 응답자 120명 중 불만족(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혹은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은 약 59%로 만족(매우 만족한다 혹은 대체로 만족한다) 응답(약 18%)보다 높았다(표6-3). 앞선 문항에서 확인한 임시 대피소 생활의 불만족스러움이 임시 대피 기간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공된 구호지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120명 중 불공정(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혹은 매우 공정하지 않다) 평가 응답(57%)이 공정(대체로 공정했다 혹은 매우 공정했다) 평가 응답(약 19%)보다 세 배나 높았다(표6-4). 이러한 구호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문항별 응답표]

표 6-3. 임시대피기간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한 구호서비스와 물품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20 (100.0%)	49 (40.8%)	22 (18.3%)	28 (23.3%)	20 (16.7%)	1 (0.8%)

표 6-4. 임시대피기간 이후, 제공된 구호지원(물품, 서비스 등)은 공정하게 배분되었습니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습니까?

(사례수)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공정했다	매우 공정했다
120 (100.0%)	47 (39.2%)	22 (18.3%)	29 (24.2%)	20 (16.7%)	2 (1.7%)

[성금 정보 전달 실태 및 필요 지원 현황]

본 실태조사에서 다룬 성금이란, 재난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지정 기관을 통해 수집되며,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다.

성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22명 중 94%가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표6-5), 알았던 사람의 경우 이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는 이웃(9건), 언론·방송(3건), 이장(2건) 등 비공식 경로가 공무원을 통한 직접 전달(1건)이나 문자·우편·전화(2건) 등 공식 채널보다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6-6). 성금은 민간의 선의로 모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자인 주민들에게 그 집행 과정이 전혀 공유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를 접한 소수의 인원조차 공식 행정 채널보다는 이웃 등 사적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배분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2명 중 약 92%에 달해, 성금 관련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표6-7).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의 경우(복수응답), 1순위로 선택한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나 소득 지원(34건), 주거 환경 개선이나 주택 수리 등의 주거 지원(29건),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안내(23건), 복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16건) 등으로 응답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표6-8).

[문항별 응답표]

표 6-5. 민간으로부터 모아진 성금 규모(모금액)와 배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전혀 알지 못한다	대체로 알지 못한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22 (100.0%)	105 (86.1%)	10 (8.2%)	7 (5.7%)	0 (0.0%)

표 6-6. 성금규모(모금액) 및 배분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족으로부터 들었다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이장을 통해 들었다	문자메시지, 우편, 개인 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언론 및 방송매체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기타
2	9	2	2	3	1	2

표 6-7. 성금 배분 결정 과정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반영되었다	매우 잘 반영되었다
112 (100.0%)	88 (78.6%)	14 (12.5%)	9 (8.0%)	1 (0.9%)	0 (0.0%)

표 6-8. 현재 본인에게 더 필요한 지원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 주택 수리 등)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의료지원(병·의원 연계 등)	생필품지원(식료품, 위생용품, 가재도구 등)	심리지원 서비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안내	복귀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	기타
29	34	8	7	1	23	16	1

[가중치 환산표: 응답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표6-8)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일자리 및 소득지원(133점) 가장 높았으며, 행정절차 안내(123점), 주거 지원 (12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수해로 인해 생업 기반이 무너진 주민들에게 당장의 현금성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 피해 주민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피해 입증이나 지원 신청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에 밀착 가이드가 필요하다. 한편, 주택 수리나 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희망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분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 주택 수리 등)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의료지원(병·의원 연계 등)	생필품지원(식료품, 위생용품, 가재도구 등)	심리지원 서비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안내	복귀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	기타
가중치	120	133	53	62	22	123	87	3
1순위	29	34	8	7	1	23	16	1
2순위	12	11	9	16	7	22	13	0
3순위	9	9	11	9	5	10	13	0

<분석표 6-1>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7. 복구와 회복

7장은 수해 이후 복구지원비 산정 과정, 피해사실 조사 절차, 주거 형태별 차별 경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처리 결과, 주택 복구 및 소득 피해 현황, 그리고 마을 복구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바람 등 복구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복구지원비 평가]

전체 응답자 126명 중 약 93%가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85%가 복구지원비를 받았다고 응답했다(표7-1, 표7-2).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전체 117명 중 78%에 달했다. 산정 근거를 대체로 잘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약 14%에 불과했다(표7-3).

복구지원비의 액수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였는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6명 중 41%로 가장 많았으며, 확인을 시도한 경우에도 지자체 공무원(30%)이나 이장(약 9%)에게 문의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스스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표7-4). 또, 이는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별 응답표]

표 7-1. 주택, 농업, 어업, 임업 등 생활/생계 수단의 피해를 입어,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이십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126 (100.0%)	117 (92.8%)	9 (7.1%)

표 7-2. 복구지원비를 수령하셨습니다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113 ³³ (100.0%)	96 (85.0%)	17 (15.0%)

표 7-3.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전혀 알지 못한다	대체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17	66	26	9	16	0

³³ 복구지원비 대상 117명 중 4명 결측 확인함.

(100.0%)	(56.4%)	(22.2%)	(7.7%)	(13.7%)	(0.0%)
----------	---------	---------	--------	---------	--------

표 7-4. 복구지원비의 액수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수)	방법을 알지 못해서 못했다.	지자체 공무원에 문의	마을 이장에 문의	손해사정인 등 민간보험업체에 문의	기타
116 ³⁴ (100.0%)	48 (41.4%)	35 (30.2%)	10 (8.6%)	4 (3.4%)	18 (15.5%)

[피해 사실 조사 합리성과 복구지원비]

피해 사실 조사가 전혀 혹은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은 117명 중 약 70%로 나타났다(표7-5). 이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재민들이 느끼는 실제 피해와 행정적 조사 결과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이후 지급된 복구지원비 또한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혹은 매우 충분하지 않다)이 약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는 긍정 응답(대체로 충분하다 혹은 매우 충분하다)은 약 8%에 불과했다(표7-6). 현재의 지원 금액이 수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항목(복수응답)을 1순위로 선택한 빈도를 보면 농지(31건), 영업장(27건), 주택(20건)이 높은 순위였고, 과수 및 과수 농지(11건), 농기계(11건)가 뒤를 이었다(표7-7).

[문항별 응답표]

표 7-5. 피해 사실 조사는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117 (100.0%)	60 (51.3%)	22 (18.8%)	24 (20.5%)	10 (8.5%)	1 (0.9%)

표 7-6. 복구지원비는 피해를 복구하는데 충분합니까?

(사례수)	전혀 충분하지 않다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13 ³⁵ (100.0%)	71 (62.8%)	21 (18.6%)	13 (11.5%)	8 (7.1%)	1 (0.9%)

³⁴ 복구지원비 대상 117명 중 1명 결측 확인함.

³⁵ 복구지원비 대상 117명 중 4명 결측 확인함.

표 7-7. 복구지원비가 부족하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합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주택	가재도구, 살림물품	농지	농기계	영농도구	과수 및 과수농지	영업장 회복
20	7	31	11	3	11	27

[가중치 환산표: 복구지원비 부족 항목]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복구지원비의 부족에 대한 복수응답(표7-7)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를 보면, 농지(125점), 영업장 회복(113점)이 높은 점수로 나왔고 주택 86점, 농기계 80점, 가재도구 살림물품 65점 순으로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항목들이 확인되었다(분석표 7-1).

구분	주택	가재도구, 살림물품	농지	농기계	영농도구	과수 및 과수농지	영업장 회복
가중치	86	65	125	80	49	49	113
1순위	20	7	31	11	3	11	27
2순위	11	17	12	17	13	7	10
3순위	4	10	8	13	14	2	12

<분석표 7-1>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이유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주택 피해 유형 및 차별 경험]

응답자 119명 중 약 70%가 자가주택(토지 소유)에 거주했으며, 약 9%(10명)가 임대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7-8). 임대 거주자라고 응답한 10명 중 30%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표7-10), 어떤 점에서 가장 차별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복수응답)는 집수리나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2건)거나, 세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거 보상이 집주인에게 지급되었다(1건)고 응답했다(표7-11).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는 행정 시스템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실거주자 중심'이 아닌 '소유자 중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와 같은 세입자 보상은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이다.

응답자 115명 중 약 27%(31명)가 건축물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했다고 답했으며(표7-9), 무허가 주택에 살던 응답자 31명 중 77%가 무허가라는 점 때문에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표7-12).

무허가로 주택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피해 조사에서 빠진 사례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보상받았으나 매우 적었던 경우는 29%, 피해 조사만 이뤄지고 보상은 받지 못한 사례가 약 21%였다(표7-13). 무허가 주택 거주 응답자의 사례 수는 적으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거주자 역시 재난으로 인한 거주지 보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별 응답표]

표 7-8. 재해 이전 귀하의 주택 소유 /임대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례수)	자가주택 (토지소유)	지기주택 (토지임대)	임대(전세)	임대(반전세, 월세)	지인의 집에 동거(임대료 없음)	기타
119 (100.0%)	83 (69.7%)	14 (11.8%)	9 (7.6%)	1 (0.8%)	7 (5.9%)	5 (4.2%)

표 7-9. 재해 이전 귀하가 살던 주택은 건축물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15 (100.0%)	31 (27.0%)	77 (67.0%)	7 (6.1%)

표 7-10. (기존 주택이 임대였다고 답한 경우) 실거주한 집이 재해피해를 입었지만 집주인(소유자)이 아니라서 피해복구지원에 있어 차별을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사례수)	겪었다	아니다
10 (100.0%)	3 (30%)	7 (70%)

표 7-11.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떤 점에서 가장 차별을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세입자에게 들어가야할 주거보상이 집주인에게 지급됐다.	집수리나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의견 미반영
1	2	1

표 7-12. 주택이 피해를 입었지만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사례수)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31 (100.0%)	24 (77.4%)	7 (22.6%)

표 7-13.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떠한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례수)	피해조사는 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피해조사에서	보상을 받았으나 매우 적었다
-------	---------------------------	-----------------------	--------------------

		누락되었다.	
24 (100.0%)	5 (20.8%)	12 (50.0%)	7 (29.2%)

[피해보상 문제 제기 여부 및 경험]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22명 중 22%(27명)에 불과하였고, 약 78%(95명)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표7-14). 불만이 있음에도 대다수가 행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체념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제기한 응답자 27명 중 자신의 민원이 전혀 혹은 대체로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이 85%로 나타났으며, 매우 혹은 대체로 합당하게 처리됐다는 긍정 응답은 0%로 나타나 만족스러운 해결 경험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표7-15). 지자체가 이재민의 입장을 경청하고 수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원칙만을 되풀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의 이의신청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별 응답표]

표 7-14. 본인이 입은 피해가 피해사실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122 (100.0%)	27 (22.1%)	95 (77.9%)

표 7-15. 지자체는 귀하의 문제제기를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합당하지 않았다	대체로 합당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합당했다	매우 합당했다
27 (100.0%)	20 (74%)	3 (11.1%)	4 (14.8%)	0 (0.0%)	0 (0.0%)

[주택 복구]

주택 복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122명 중 약 20%(24명)가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며(표7-16), 이 중 75%는 임시 주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택 복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7-17). 복구 방식으로는 일부 수리(61%), 신축(33%), 주택 구입(약 6%) 순으로 나타났다(표7-18). 집을 복구할 때 가장 큰 걱정으로 비용(약 78%)이 꼽혔으며(표7-19), 복구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표7-6, 113명 중 약 82%)과 연결하면 지원비 부족이 복구 착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복구 계획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 그 이유를 밝힌 6명의 50%는 비용이 부족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표7-20). 또, 수해 이전에 살던 마을에서 계속 거주할지를 묻는 응답에 전체 114명 중 69%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해, 주거 지원이 다른 곳으로의 이주보다 수해 전 거주지에서의 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표7-22).

[문항별 응답표]

표 7-16. 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어, 그대로 거주할 수 없고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122 (100.0%)	24 (19.7%)	98 (80.3%)

표 7-17. 주택 복구 계획이 있습니까? (임시주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례수)	있다	없다
24 (100.0%)	18 (75.0%)	6 (25.0%)

표 7-18. 주택 복구(회복)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새로 건축	일부 수리	주택 구입
18 (100.0%)	6 (33.3%)	11 (61.1%)	1 (5.6%)

표 7-19. 주택 복구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비용	안전 (산사태, 폭우, 산불 재발 등)
18 (100.0%)	14 (77.8%)	4 (22.2%)

표 7-20.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비용이 부족해 세우지 않고 있다	어디에 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계획을 세울 마음의 여유가 없다
6 (100.0%)	3 (50.0%)	2 (33.3%)	1 (16.7%)

표 7-22. 재해 이전에 살던 마을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 기타에 이유 추가 기술)

(사례수)	의향이 있다	잘 모르겠다	의향이 없다
114 (100.0%)	79 (69.3%)	28 (24.6%)	7 (6.1%)

[소득 피해 현황 및 회복 전망]

수해 이전의 주요 소득 활동에 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22명 중 약 56%가 농업(논/밭작물), 16%가 농업(과수)으로 응답했고, 상업/서비스업 9%, 연금소득(기초/노령/국민) 약 6%, 기타 13%로 나타났다(표7-23). 이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경지나 작물 피해가 가계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소득 활동의 형태로는 전체 응답자 120명 중 자영업이 약 77%, 임대 사업자가 19%, 고용직 4%였다(표7-24).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보험 등의 안전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126명 중 약 90%가 수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표7-25). 소득 회복 측면에서는 응답자 113명 중 가장 많은 약 34%가 소득회복률 10% 미만이라고 답했고, 30~50%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응답이 20%, 50~80% 수준 회복이 약 20%, 10~30% 수준 회복이 14%였다. 80~100% 수준 회복으로 응답한 비율은 12%에 그쳐, 조사 지역 응답자들에게 경제활동 피해 복구 및 소득 회복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표7-26).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114명 중 35%가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부정(대체로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했으나, 긍정(대체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응답도 34%로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표7-27).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지원으로는 복구지원비 확대(약 61%)가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으며, 소득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본소득 지원(약 22%)이 뒤를 이었다(표7-28).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82%로, 이는 피해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별 응답표]

표 7-23. 재해 이전의 주요 소득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례수)	농업(논/밭 작물)	농업(과수)	연금소득(기초/노령/국민)	상업/서비스업(소매, 숙박, 음식, 기타 서비스)	기타
122 (100.0%)	68 (55.7%)	20 (16.4%)	7 (5.7%)	11 (9.0%)	16 (13.1%)

표 7-24. 주요소득활동 수단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사례수)	자영이다	고용되어 임금을 받았다	임대했다
120 (100.0%)	92 (76.7%)	5 (4.2%)	23 (19.2%)

표 7-25. 재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입지 않으셨습니까?

(사례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지 않았다
126 (100.0%)	113 (89.7%)	13 (10.3%)

표 7-26. 귀하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재해 이전 대비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재해 이전이 100%)

(사례수)	10% 미만	10~30%	30~50%	50~80%	80~100%
-------	--------	--------	--------	--------	---------

113 (100.0%)	38 (33.6%)	16 (14.2%)	23 (20.4%)	22 (19.5%)	14 (12.4%)
-----------------	---------------	---------------	---------------	---------------	---------------

표 7-27. 귀하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4 (100.0%)	18 (15.8%)	22 (19.3%)	35 (30.7%)	36 (31.6%)	3 (2.6%)

표 7-28. 경제활동의 회복을 위해 다음 중 어떠한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복구지원금 확대	회복이 될때까지의 소득지원 (기본소득)	금융지원(무/저이자)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기타
114 (100.0%)	69 (60.5%)	25 (21.9%)	11 (9.6%)	5 (4.4%)	4 (3.5%)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

응답자 123명 중 마을 공간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질문에 부정(대체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54%)이 긍정(대체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응답(33%)보다 높았는데, 이는 마을 피해보다 농지나 영업장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표7-29).

재조성 시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1순위로 선택한 것을 보면 폭우,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38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표7-30).

[문항별 응답표]

표 7-29. 재해로 마을 공간의 피해가 커서 새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 (100.0%)	57 (46.3%)	10 (8.1%)	15 (12.2%)	21 (17.1%)	20 (16.3%)

표 7-30. 재해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할 때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공동편의시설(운동기구, 정자, 마을회관 등)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아름다운 경관 회복
38	3	17	2

[가중치 환산표: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복수응답(표7-30)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137점)이 가장 높았고,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97점), 공동 편의시설(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재 설계가 마을 재조성의 핵심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구분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공동편의시설(운동기구, 정자, 마을회관 등)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아름다운 경관 회복	대중교통 연결
가중치	137	31	97	28	10
1순위	38	3	17	6	0
2순위	9	6	21	6	2
3순위	5	10	4	10	6

<분석표 7-2>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보완점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 어떤 모습을 갖추길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난방, 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17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16건), 마을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10건), 소득이 높은 마을(9건)을 순서대로 꼽았다(표 7-31).

표 7-31. 재해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면 어떤 마을이 되길 기대합니까?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전기세,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마을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난방, 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소득이 높은 마을
16	7	10	17	9

[가중치 환산표: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 사항]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기대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표7-31)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난방, 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79점)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72점),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63점) 순위였다.

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전기세,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마을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난방, 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소득이 높은 마을
가중치	72	48	63	79	43
1순위	16	7	10	17	9
2순위	5	11	13	11	6
3순위	14	5	7	6	4

<분석표 7-3>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마을 공동체 결속과 갈등]

마을 재조성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절차로는 주민 의견 수렴(약 59%)이 가장 많아서 과반수의 주민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어 지자체의 결정(약 16%), 마을 리더의 결정(10%), 전문가의 도움(약 9%) 등을 선택했다(표7-32).

수해 발생 이후 이웃 관계와 마을 공동체 결속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물품 배분 과정에서 상호 배려가 있었다는 긍정(대체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응답이 124명 중 약 49%였다(표7-33-1). 재해 직후 서로를 도왔다는 긍정 응답은 52%로 높게 나타났다(표7-33-2). 이웃 관계가 더 좋아졌거나(약 41%),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약 38%)는 긍정적 응답도 부정 응답보다 우세했다(표7-33-3, 표7-33-4).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난 이후 이웃 관계가 더 좋아졌다거나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는 응답은 재난 직후 서로 도왔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125명 중 46%가 주민 간 갈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표7-34), 이 중 57명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피해복구 과정의 정보부족(약 30%)이나 불충분한 피해 지원 수준(26%)을 지적했다(표7-35).

실태조사 진행 시점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이 약 33%였으며, 해결을 포기한 경우(약 26%)까지 포함하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약 59%에 달했다(표7-36).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정보 부족과 복구지원비 배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불편함인 만큼, 피해복구나 산정 과정에서 배분 기준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복구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문항별 응답표]

표 7-32. 재해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면 이 중 어떤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사례수)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도움	지자체의 결정	마을리더들의 결정	기타
58 (100.0%)	34 (58.6%)	5 (8.6%)	9 (15.5%)	6 (10.3%)	4 (6.9%)

표 7-33-1. 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물품 배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상호간에 배려했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4 (100.0%)	20 (16.1%)	9 (7.3%)	35 (28.2%)	43 (34.7%)	17 (13.7%)

표 7-33-2. 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재난 회복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도왔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 (100.0%)	18 (14.6%)	9 (7.3%)	32 (26.0%)	37 (30.1%)	27 (22.0%)

표 7-33-3. 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이웃 간 관계가 더 좋아졌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 (100.0%)	17 (13.8%)	12 (9.8%)	44 (35.8%)	37 (30.1%)	13 (10.6%)

표 7-33-4. 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우리 마을(공동체)은 재난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

(사례수)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0 (100.0%)	21 (17.5%)	10 (8.3%)	44 (36.7%)	30 (25.0%)	15 (12.5%)

표 7-34. 재해 복구 과정 중 이웃간의 갈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없다	듣거나 목격했다	직접 경험했다
125 (100.0%)	67 (53.6%)	30 (24.0%)	28 (22.4%)

표 7-35. 재난 후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금 배분에서 불합리한(불공정한) 기준으로 불편한 감정	불충분한 피해 지원 수준	피해지원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다툼	기타
57 ³⁶ (100.0%)	13 (22.8%)	15 (26.3%)	17 (29.8%)	5 (8.8%)	7 (12.3%)

표 7-36. 해당 갈등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사례수)	현재도 갈등 중이다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해결을 포기했다	잘 모르겠다
58 (100.0%)	19 (32.8%)	14 (24.1%)	15 (25.9%)	10 (17.2%)

³⁶ 갈등을 직간접 경험한 58명 중 1명 결측 확인함.

결론

1. 보고서 요약

[수해의 물적 피해와 행정의 평가]

2025년 산청 수해는 주택뿐 아니라 영농 기반과 생계수단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응답자의 약 45%가 주택 피해를 80% 이상 ‘극심한 수준’으로 체감했을 뿐 아니라, 생계수단 피해 85건과 영업장 피해 73건 등으로 높게 나타나, 주거와 소득 기반이 동시에 파괴되는 중첩 피해를 본 상황이 확인된다. 가전·가구·의류 등 가재도구와 사진·기념품 등 추억이 깃든 물품에 극심한 피해를 본 응답자도 약 60% 이상으로, 단순 자산 손실을 넘어 일상이 무너진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는 주민 체감과 큰 괴리를 보였다. 주택, 영업장, 가재도구 등 모든 항목에서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행정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 약 79%가 행정기관의 과소평가를 지적해 주택(약 72%)과 영업장(약 76%)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피해 사실 조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복구지원비가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80%가 넘었다. 농지, 영업장, 주택 순으로 “지원비가 특히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집중되어, 현재의 제도가 주거와 생계 및 영농 기반의 동시 복구라는 현실적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해 당시 대피의 어려움]

응답자의 76%는 재난문자를 수신했지만, 약 24%는 수신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대피 정보 획득 경로도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찰·소방 등 공무원을 통한 직접 안내는 미미했다. 대피 수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64%가 자가용으로 이동했고, 이 중 상당수가 본인 차량을 이용하였다. 구조 차량이나 공적 수송망을 통한 대피는 거의 없었으며, 도보·농기계 대피도 일부에 그쳐, 대부분 자력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해, “언제, 어디로,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안내 부재가 공포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시 대피소에 바로 머문 비율은 32%에 그쳤고, 대피소 체류자의 60%가 한 번 이상 대피소를 옮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시주택 지원 정책의 한계]

수해 이후 임시주택은 장기 주거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았다. 조사 시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마을과 먼 임시주택 단지에, 3분의 1가량은 마을에 가까운 단지에, 일부는 수해 이전 집터에 설치된 임시주택에서 거주 중이었다. 임시주택 생활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50%에 이르고 긍정 응답은 8%에 그쳐, 기본적인 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냉난방, 인덕션, 온수기 등 내부 시설의 미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환기나 통풍 부족, 사생활 보호 미흡, 좁은 공간, 이웃 소음 순으로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시주택의 제공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2년 이상 응답이 각각 27%씩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한편, 임시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는 “부분 피해로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물품 지원 소외(8%)와 심리적 고립(7%)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산청 수해 피해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IES-R-K 척도를 적용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나왔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중 ‘심각한 PTSD 위험’ 범위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약 69%가 PTSD 위험군(25점 이상)에 속하며, 그중 55%는 40점 이상으로 ‘심각’ 또는 ‘매우 심각’ 위험군에 해당했고, 정상 범위(0~17점)에 속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침습·회피·과각성 증상이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 분석 결과, 수해 당시 생명의 위협 경험, 물적 피해 규모, 경제 회복 수준, 행정 평가나 보상에 대한 불신, 정보 제공이나 구호서비스의 공정성 인식 등이 PTSD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점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약 12점 높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느끼거나 복구지원비가 불충분하고 지원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수준이 뚜렷이 심화했다. 소득 회복 정도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서, 경제 회복 수준이 높을수록 PTSD 위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이웃 간 갈등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정보제공과 비합리적인 복구지원비]

재난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보 제공과 구호 지원은 체계성과 공정성 측면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피해 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복구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 핵심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는 이장을 통한 전달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이웃, 문자·우편·전화, 공무원 직접 전달 순이었다. 이는 중요한 정보 전달이 마을 이장이나 이웃 등 비공식 구두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 왜곡, 편중될 위험이 상존한다. 실제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마을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 복구 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해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약 8~13% 수준에 그쳤으며, 절반 가까이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임시대피 기간 이후 구호서비스나 물품 제공 전반에 대해서도 약 59%가 불만족을 표했고, 공정성 평가에서는 57%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해 공정하다는 응답(약 19%)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 성금과 관련된 투명성과 참여성 문제도 두드러진다. 성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 94%가 “전혀 알지 못한다” 또는 “대체로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정보를 접한 소수도 이웃, 언론, 이장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자, 우편, 공무원 안내 등 공식 채널의 역할은 극히 미미했다.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약 92%에 달해, 민간의 선의로 모인 자원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지원비 대한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다. 피해 사실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약 70% 수준에 달하고, 복구지원비가 피해 복구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약 8%에 그친다. 특히 농지, 영업장, 주택 회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소득 회복 현황에서도 약 34%가 소득회복률이 10% 미만이라고 답했고, 80~10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주민이 경제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지원으로는 복구지원비 확대(약 61%)와 소득 회복 시점까지의 기본소득·생계비 지원(약 22%)을 제시해, 전체 응답자의 약 83%가 직접적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늦어지는 복구와 회복]

복구와 회복 측면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물질적·정서적·사회적 차원의 복합 위기 상태에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응답자의 약 90%가 수해로 경제활동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고, 소득회복률이 30% 미만인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등, 수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실질적 생계 복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요 소득 활동이 농업(논·밭·과수)에 편중되어 있고 소득 수단의 약 77%가 자영업인 구조에서, 농지, 과수, 영업장 피해가 곧바로 가게 경제 붕괴로 연결된 상황이다.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긍정 응답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각각 약 35%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해 이전 마을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69%가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약 25%는 “잘 모르겠다”, 6%는 “의향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웃 간 관계는 한편으로는 갈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지지와 연대를 통해 경제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잠재적 자원으로 확인되어, 공동체 기반 회복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 정책 및 제도 개선 시사점

첫째, 물적 피해 평가 체계를 현실화하고 생활 밀착 자산을 제도권 보상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주택과 더불어 영농 기반, 영업장, 가재도구, 추억 물품 등 주민이 실제로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항목을 별도 평가 및 산정하고, 주민 자가평가를 반영하는 보완 절차를 마련해 행정 평가의 과소 산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피해 사실 조사 단계부터 주민, 마을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면, 조사 신뢰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둘째, 재난 초기 대피 체계를 구체화하고, 다중 경보체계 마련 및 주민 중심 방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문자는 단순한 발송을 넘어, “어느 시점에, 어느 경로를 통해, 어느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지까지 안내하는 표준 문안과 지도에 기반한 안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난문자 미수신자, 고령층, 통신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 방송, 방문 안내, 확장기 차량 등 오프라인 수단을 연계한 다중 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평상시 이웃과 함께 대피 훈련을 하는 주민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셔틀버스를 비롯한 공적 이동수단 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셋째, 임시대피소와 임시주택은 단순한 ‘피난 공간’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로 재설계해야 한다.

임시대피소에는 세면 및 샤워 시설, 화장실, 적정 면적과 칸막이·텐트 등 사생활 보호 장치, 여성용품·의약품·의류·침구와 같은 기본 물품 등을 표준 구성으로 의무화하고, 성별, 연령,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주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마을과의 거리나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제공 기간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복구 진척도와 소득 회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지원 체계를 재난 대응의 ‘선택적 부가 서비스’가 아닌 필수 인프라로 편입해야 한다.

재난 직후부터 장기 회복 단계까지, 전문 심리상담 인력을 마을 단위로 배치하여 집단 상담과 1:1 상담을 병행하고, IES-R-K 등 표준화 척도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지속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기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주민이 요구하는 ‘몇 달 이상,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개입을 목표로 설계하고, 농번기나 생계활동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방문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 제공, 성금, 구호 배분 전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복구계획, 담당자 연락처, 성금 모금액과 배분 기준, 배분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구축하고, 문자, 우편, 마을 게시판,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로 반복 안내해야 한다. 성금, 구호, 복구지원비 배분을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피해 주민 대표, 마을 이장,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물론이고, 배분 기준과 개별 배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독점'과 '불공정 배분'에 대한 의혹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와 생계 회복을 중심에 둔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복구지원비 단가와 상한을 현실화하여 농지, 과수, 영업장, 주택 등의 복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고, 소득 회복 전까지 일정 기간에 걸쳐 기본소득 또는 긴급 생계비 형태의 소득 보전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농 재개를 위한 종자나 자재 지원, 임시 혹은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 등도 병행하여, 주민이 '빛에 의존한 복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복'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 단위의 상호 돌봄 모임, 주민이 주도하는 복구 계획 수립 워크숍, 공동작업장이나 공동 재배 등 경제·사회 활동을 결합한 회복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웃 간 신뢰와 지지를 촉진하면, PTSD 위험 완화와 경제적 재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주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행정에서 재정 및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T. +82 2 3144 1994 **F.** +82 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도움을 주신 분들

- 데이터 분석: 정용혁
- 심리 분석 및 자문: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이윤호 소장

문의 press.kr@greenpeace.org

발간 2026년 4월